

노동조합 주체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황 인 용(8·15민족공동행사준비위 정책위원)

1. 들어가며

어느덧 8.15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8.15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분단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그간 8.15는 해방의 기쁨을 나누기에 앞서 갈라진 민족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하는 날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8.15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전개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38선이 그어진 이래, 우리 민족은 통일을 향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한반도에 드리워진 두터운 냉전의 벽과 내외 반통일세력의 방해로 인해 아직도 분단의 벽은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말을 앞두고 우리 앞에는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새로운 상황이란 바로 주객관적인 정세의 변화이다.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객관정세가 일변하였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함께 찾아온 탈냉전의 물결이 이제 한반도에도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본격화되고 있는 북미관계의 질적인 변화, 그리고 연이은 북일 관계의 정상화 움직임은 바로 한반도에 냉전구조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냉전질서하의 적대세력들은 이제 서로 악수를 하며 상호 교류와 협력관계를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한반도에 드리운 두꺼운 군사·정치·경제적 장벽들을 허물어 낼 것으로 보인다. 분단을 강제했고 그간 통일을 가로막았던 냉전구조가 해체되어 가면서 주변정세는 이제 통일환경의 상수(常數)에서 변수(變數)로 전환되어 통일문제를 '희망사향의 영역'에서 '실현가능한 영역'으로 앞당겨 놓

온 것이다.¹⁾

두 번째로, 주체적인 측면에서 주체역량이 양적, 질적으로 강화되었다. 1945년 이래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고양기는 크게 세 차례 정도로 추산된다. 1945-48년의 해방공간이 그 첫째요, 두 번째는 4.19 혁명 시기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위의 첫 번째, 두 번째의 고양시기를 거치면서 내의 통일운동은 반통일세력들의 엄청난 탄압으로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당해야만 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타파해 내고 지금 세 번째 통일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확대된 운동공간을 이용하여 1988년 남북학생회담 성사투쟁으로 시작된 통일운동은 이내 각계각층으로 전파되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권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매년 범민족대회를 개최해 내며 날로 통일대오를 확대해 나갔다. 냉전체제로 인하여 강고했던 주변정세가 하나의 변수로 전환된 지금 주체역량의 강화 여하에 따라 통일은 이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만한 사안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내의 여건의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통일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어떠하였는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직도 노동자들은 통일운동에 있어서 전 민족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의 관심과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그간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억압 속에서 생존권과 초보적 민주권리쟁취를 위해서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여타 사회문제 특히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참여를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정치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범민족대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왔으며, 특히 93년부터는 범민족대회 노동자추진위 구성 등이전보다 발전되고 조직적인 형태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통일운동을 청년학생 중심에서 기층민중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하여 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의 통일운동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여전히 노동운동은 입투와 단협중심의 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8.15를 맞이하여 민주노총(준)이 통일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민주노총(준)이 통일운동 참여를 결의함으로써 그간 선진적인 노동자 중심의 통일운동이 이제 조합원대중 중심의 통일운동으로 바뀌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준)의 통일운동 참여는 전체 통일운동대오에 양·질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준)의 결의는 그 첫걸음에 불과하며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을 것이다.

이 글은 노동자 통일운동이 그간의 선진적인 사람 중심에서 조합원대중 중심으로 새

1) 강정구, 「민족과 통일」, 「통일국가의 체제 구상」, 한겨레신문사, 1995

로운 질적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시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관점을 재차 확인하고, 그간의 노동자 통일운동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해 보자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다소 일반론적이고 기존의 성과물을 재정리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후 현시기 요구되는 노동자 통일운동의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대한 보다 발전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2. 노동자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

1) 분단구조 해체의 필요성

분단이 끼친 피해는 남과 북의 민중들에게 공히 영향을 미친다. 이산가족의 아픔이 그러하며, 휴전선을 두고 남북이 쏟아 붓고 있는 비생산적인 방위비가 그러하며, 반 세기가 다 가는 동안 형성된 민족간의 이질감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글에서는 노동자를 비롯한 남한민중에 대해 분단이 강요하는 억압장치만을 간략히 재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분단과 정치구조

분단과 결부되어 조명된 한국 정치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외세의존성이다. 외세의존성은 외세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민족의 자존심 문제와 직결되게 된다.

이러한 외세의존성으로 인해 한국의 정치구조는 철저히 비민주적으로 되었다. 민중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곧 외세의 이해관계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정치구조의 비민주성은 지난 날에는 주로 군부독재세력에 의해,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이후로는 다소 변형된 형태로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문민시대로 일컬어지는 현재도 '북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의 자유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의 노동자는 아직도 조직 결성의 자유도, 노동조합을 통한 정치참여도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²⁾.

2)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니만

나. 분단과 경제구조

“1988년의 경우 가치 총량 217조 원 중에서 국내에 남아 있는 것은 73조 원에 불과하고 144조 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³⁾

경제인여의 대외유출, 한국경제의 대외예속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이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남한경제가 세계자본주의 질서의 하부구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분단이 강요한 것이었다. 즉 외세는 원조를 미끼로 한국경제에 대외의존성을 강요하였으며, 한국을 자신들의 자본시장, 기술시장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이 땅의 정권은 대외지향적이고 외세의존적인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은 한국 자본주의의 천민적 성격과 결부되어 건전한 경제발전을 막아 왔다. 이미 수출산업의 육성과정자체가 외국원조에 대한 특혜적 시혜와 연계된 정경유착을 구조화시켰고, 비생산적인 영역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여 왔으며 그 피해는 다수의 민중들에게 돌아왔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최근 엔 고 현상을 이용하여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의 대활황속에서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제현되고 있다.

다. 분단과 군사구조

“현재 한반도에는 자체 방위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병력과 무기가 존재(6.25전쟁 당시보다 80배가 넘는 파괴력을 가진 수준)하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북한 양쪽을 합쳐서 1주일 이내에 24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며, 전쟁이 1개월 이상 계속되면 500만 명의 사상자와 시설의 90%가 파괴될 것이라는 예상결과가 나온 바 있다”⁴⁾

지금 이 순간도 남북한은 체제보위를 위해 엄청난 액수의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다(<표 1> 참조). 그리고 얼마 전 북한핵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북한의 영변에 대한 제한적 폭격을 실제 검토한 적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제한전쟁이라도 일으켰다면 이후 전개될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몹서리가

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 더 나아가 서구의 예처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까지를 만들 수 있어야 진정한 지위향상이 가능한 하나의 상식이다.

3) 박세길, 『한국자본주의와 공황』, 1990.

4) 동아일보, 90년 11월 8일자.

처지지 않을 수 없다. 분단은 이처럼 인권문제이전에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표 1> 남북한 군사비 지출 추이

(단위: 백만 불)

	1982	1985	1987	1989	1990	1991
남 한	5, 318	6, 135	7, 195	8, 057	8, 163	7, 826
북 한	1, 454	1, 765	1, 781	1, 821	2, 003	2, 048

*자료: SIPRI, Yearbook, 1989.

라. 분단과 사회문화

분단은 비생산적인 지출(군사비등)을 계속 확대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세계화를 논하고 있는 작금의 문명시대에도 이러한 추세는 크게 변하고 있지 않다. 아래의 <표 2>는 87년 당시 한국과 유사한 국력을 소유한 국가들과 비교한 예산대비 사회복지비의 지출내역이다. <표 2>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한국의 방위비는 작게는 2배 정도에서 많게는 4배 이상이다. 그러나 복지비는 역으로 이들 나라에 비해 작게는 1/2에서 많게는 1/5의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중상위국가군의 예산대비 방위비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1987년)

(단위: %)

	방위비	복지	교육	보건	주택
파나마	5.88	12.66	15.61	16.71	3.36
아르헨티나	6.92	31.68	6.92	2.12	0.32
포르투갈	5.39	24.02	9.54	7.79	1.63
이란	14.19	14.31	19.62	6.05	3.13
한국	27.31	6.44	18.34	2.35	0.81

자료: ILO, World Development, 1989. IMF, International Finance Statistics, 1989.

따라서 군축이 이루어져 군사비가 사회복지비로 전환될 수 있다면 노동자와 민중들

의 실생활은 지금보다 엄청난 향상을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위비를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는 중상위권 국가군의 평균 방위비 지출비율인 12.1%(지금 방위비의 약 45% 내외)선으로 감축할 경우 93년도 화폐가치로 연간 4조 9,846억 원의 경제잉여가 발생하게 된다는 분석이 있다.⁵⁾ 이 금액은 우리나라 1000만 가구에 나누어주면 가구당 83만 3천 원 가량 나누어 줄 수 있으며, 매년 20평짜리 아파트 12만 5천 채(1채당 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를 지어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이다. 우리는 지금 이처럼 엄청난 액수의 돈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마. 분단과 노동운동

분단 50년 동안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체제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 왔다. 한국에서는 반공이 국시로 자리 잡았으며, 누군가가 저 사람 빨갱이다 하면 전후 사정볼 것 없이 그 사람은 배제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 족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대와 80년대 초반 해도 노조 활동은 그 자체가 '빨갱이짓'이라고 매도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곤 했다.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노조활동이 보편화되어 있는 지금도 이러한 의식은 굴절되고 왜곡된 형태로 깊게 남아 있다. 일례를 들어 91년 현대자동차 연말성과급 투쟁 당시에는 작업장에 '연말성과급투쟁에 승리해서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김일성 장군께 훈장 받으러 가자'라는 유인물이 뿌려져 과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분단은 이처럼 노동자의 의식과 노동운동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이외에도 방산업체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제한과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노동운동 탄압 등 아직도 분단이 새겨 놓은 노동운동에 대한 장애요인은 깊이 남아 있다.

2)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문제를 단지 지리적인 통합, 분단상태 이전으로의 회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통일은 남북한 모두 내부적 차원에서 안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을 간직할 뿐, 반 세기가 남긴 상호간의 이질감 해소와 통일 이후 제기될 심각한 여러 문

5) 허선, 「군축에 따른 사회복지의 발전가능성: 수도권연석회의 토론회자료집」, 1993.

제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통일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⁶⁾

(1) 통일은 민족의 재창조과정

통일은 우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반 세기를 통해 형성된 남과 북의 서로 상이한 체제가 발전적으로 승화되는 새로운 재창조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재창조란 곧 계승과 극복의 과정이다.

우선 통일은 계승이다. 과거 50여년간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래도 남과 북이 이룩해놓은 성과가 없을 수 없다. 통일은 바로 이러한 성과물을 충분히 계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남한의 경제발전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치 있는 부분을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교류 흡수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영역을 민족전체의 공통의 것으로 자리매김해나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통일은 과거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과정이 되어야 한다. 과거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우선 통일국가의 건설원칙과 노선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노선이 있어야 과거사 가운데 무엇이 극복대상으로 되는지가 분명해지며 극복대안 도출이 가능해진다. 그것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반드시 합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민중의 생존권과 정치적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대원칙을 따져볼 수 없다.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노조활동의 자유 등 민주적인 노동권리의 확보, 정치적 권리의 확보, 사회복지의 획기적 확대 등이 주요한 요구사항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승도 어렵지만 과거에 대한 극복과정은 더더욱 어려운 법이다. 그것은 결국 통일국가의 건설과정에 참여한 각 세력들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만약 공존공영의 통일국가 수립과정에서 정부와 자본 주도의 통일이 실현된다면 노동자

6) 통일의 의미를 논하기 전에 어떤 상태를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 해명되어야 한다. 이 점을 놓고 크게 2가지 입장이 대별된다. 그 하나는 남과 북이 제도적 차이를 극복하였을 때를 비로소 통일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입장은 관변이 주장하는 제도통일론의 입장에서 있는 경우도 있고, 당분간은 남과 북의 공존공영을 인정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존재하는 견해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이 공존공영하면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것 그 자체가 통일이라고 보는 견해이다.(물론 이 때 중앙정부의 비중이 처음에는 느슨하게 출발한다 해도 그것은 통일국가의 중앙정부로 인정하는 태도이다.) 이 입장은 따라서 민족전체의 공통부분의 확대·강화 과정은 통일이후 제기되는 주요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의 이러한 요구는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 통일이 갖는 인류사적 의미

한반도의 통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세기적 사건이자 현하 세기 말 인류가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대안체제'의 모색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소련 동구해체로 형성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맞이하며 인류는 '참으로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새로이 던지고 있다. 사회주의는 크게 약화되었지만 자본주의사회 역시 세계 도처에서 인류의 삶에 고통과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이후 체제혼합국가->단일체제국가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은 인류사회에 참으로 많은 시사점을 던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노동조합과 통일운동

1) 기존의 노동자 통일운동 약평

노동자 통일운동은 아직 그 연원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발전을 보여왔다. 이 하에서는 93년 범노추결성과 민주노총(준)의 조직적 참여결정 등을 기점으로 노동자 통일운동을 3개 시기로 나누어 개괄해 보고자 한다.

(1) 범노추결성 이전 시기(93년 이전)

88년을 기점으로 통일운동은 각계 각층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지만, 노동자들의 참여는 아무래도 1990년 범민족대회를 그 첫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당시 제1차 범민족대회의 경우 현장조합원의 참여는 많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은 당시 존재했던 ILO 공대위를 통해 범민족대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금노련),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7) 이 경우 통일이란 남북합의서 제1장 1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연맹(언노련)⁸⁾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많은 노동조합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1차 범민족대회에서는 노동자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꾸리지는 못했고,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계획도 없었다.

한편 이러한 광범위한 노동조합들이 참여하였던 범민족대회는 1차 대회를 거친 이후부터 정부당국의 탄압과 내부 동력의 침체로 갈수록 그 대오가 축소되어 갔다. 노동진영은 2차, 3차 범민족대회에는 지역단위나 개별 분산적인 형태로 참여를 해왔다.

(2) 범노추시기(93 - 94년)

제2차, 제3차 범민족대회를 거치면서 개별적으로 혹은 지역별 대오에 합류하여 참여 하던 노동자들은 1993년을 기점으로 다시 조직적인 참여를 시도하게 되었다. 93년 7월에 노동단체 중심으로 간담회가 조직되고, 이후 범민족대회 노동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여기에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연협, 전국노문협, 민중정치연합, 기독교노동자총연맹, 전국카톨릭노동사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동자 추진위원회 등 총 7개 단체가 참여하였다⁹⁾. 그리고 노동자추진위원회는 노동자 통일토론회와 자료집을 개최·발간하고, 통일놀이 한마당과 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노동자추진위원회는 여전히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당시 평가서에서는 범노추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범노추결성시(단체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결성이 늦어진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일부 지역(성남, 인천, 대구, 전북)에서는 지역 노동자추진위가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조직적인 연계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이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더 통일적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즉 중앙에서만 단체를 결성할 것이 아니라 지역및 업종과 노조연합단위에서까지 통일적으로 조직할 것이 요망된다. 더불어 대공장(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추진위가 성립할 수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정세와 활동의 미흡으로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¹⁰⁾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안고 출발한 93년도 노동자추진위는 94년에 들어서서도 그 활동이 노동단체 중심으로 흐르면서 내부의 복잡한 이견노출과 선진노동자 중심의 대회조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8)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자료집(1990.7.4-8.17).

9) 『1993년 범민족대회 자료모음』, 234쪽

10) 상동, 234쪽

(3) 민주노총(준)의 조직적 참여시기(95년 이후-)

95년은 우리 노동운동사에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은 우선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 민주노총(준)이 출범하였다는 것이요, 두번째로는 노동운동이 이제 통일운동에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8.15민족공동행사(준)'에는 민주노총(준)을 비롯하여 민족회의, 민예총, 종교인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단위가 참가하고 있다. 아직도 8.15행사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준)이 통일운동에 조직적인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노동자 통일운동 뿐만 아니라 전체 통일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갖 출발한 노동조합 주체 통일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이하에서는 민주노총(준)의 통일운동 참여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만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그간 현장 조합원의 통일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에는 노동단체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어온 점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노동단체들은 그간 통일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과 업종에서 통일운동을 전파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나서지 못하는 한, 노동자 통일운동은 결코 대중화, 일상화될 수 없다. 이제 노동조합이 통일운동 참여를 결의함으로써 조합원의 실정과 준비정도를 고려한 대중적 통일운동이 전개되는 새로운 국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민주노총(준)의 조직적 참가는 통일운동상에 제기되는 제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운동으로서의 통일운동 본래의 성격을 구현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돌이켜보면 그간 통일운동은 그 동기의 순수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많은 한계점을 노정시켜 왔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는 원칙과 당위만을 강조하는 급진적인 사고가 차지하고 있는 측면이 적잖은 바, 민주노총(준)의 참여는 이러한 부작용을 약화, 해소시켜 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2) 노동조합 주체 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그간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생존권과 초보적 인권마저 억압받고 있는 현실에서 여타 사회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최소

한의 여유조차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또한 노동운동이 분단모순이라는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운동이 걸어온 발걸음에는 사실 합법칙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민주노총이 자신의 정책과제로 '사회개혁'을 내걸고 나선 것은 노동운동발전의 필연적 과정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은 통일운동에의 조직적 참가를 결의한 이후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통신노조 문제와 임투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민노총은 조직내에 통일특위를 구성하고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하고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는 그간 노동자 통일운동을 경과하면서 제기되고 논의된 바 있는 2가지 과제만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통일운동에 대한 기본관점에 대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운동은 8월에 하는 행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통일운동은 8월만의 행사로 전락하고 만다. 즉 연초에는 임투준비, 4월, 5월 늦으면 6, 7월까지 임투, 그리고 임투가 끝나면 8월 통일행사 참여, 그리고 일상활동이라는 의례적인 활동방식을 극복해내야 한다.

두 번째로 지금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과 태도를 정립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듯 남한의 재벌과 대기업은 대북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조만간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 정립은 뒤로 미룰수 없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통일조국의 건설이 현실의 문제로 재조명되면서 통일국가의 상은 무엇이며, 노동자가 바라는 통일국가의 이념과 정책기조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등도 시급하게 토론되고 정리되어야 할 주제들이다. 기타 여러가지 과제들이 노동자들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4. 결론에 대신하여

최근 조성된 정세는 민족통일에 매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고 있다. 남과 북에 대한 교차승인은 냉전시대와는 달리¹¹⁾, 한반도에 해빙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 움직임 속에서 기존의 정전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이 이미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는 필연코 군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대립이 약화되면 대화와 상호교류 협력이 강화되기 마련이다. 한반도의 군

11) 미국은 이미 60년대 말부터 남북교차승인을 추진하였는바, 이러한 냉전시대의 교차승인은 강고한 냉전의 틀 내에 분단을 합법적으로 고착화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사적 대치상태 해소는 남과 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하게 되며, 이는 민족공동체 의식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¹²⁾ 바로 이 점이 최근 정세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민족공동체 의식의 발전이야말로 통일의 원동력이자 현 정세가 안고 있는 합정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추진 중인 교차승인은 반드시 유리한 측면만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교차승인 과정에 주변 4강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되어 남과 북이 평화적 공존상태가 고착화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분단체제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민족공동체 의식의 비약적 발전에 기초한 전민족의 하나된 힘, 각계각층의 확대된 통일역량뿐이다.

최근 북경 살회담 이후 남북 사이에는 그간 단절되었던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고 새로운 남북관계수립을 위한 발걸음이 다시 바빠지고 있다. 8.15 50주년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절실함은 남과 북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당국간의 이러한 접촉 속에서도 민간통일운동의 공간이 과연 대대적으로 열리게 될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다. 정부는 여전히 창구 단일화를 고수하며 정부 주도의 통일정국을 상정하고 있고, 수구세력의 반발과 함께 국가보안법도 의연 살아있는 것이 지금의 형편이다.

하지만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태세도 만만치 않은 않다. 올해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충실히 구현해내기 위해 8.15 민족공동행사라는 광범위한 틀을 짜고 통일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 8.15 민족공동행사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프로그램이 준비 중이며, 민주노총(준)을 비롯한 노동진영에서도 노래자랑 등 통일한마당과 통일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제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에 나설 때이다. 우리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사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할 노동자는 분단 극복과 새로운 통일국가수립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안고 있다. 단위 현장에서 출발하는 노동자의 통일운동은 95년 통일운동의 새지평을, 나아가 민족의 미래를 열어낼 수 있을 것이다. □

12) 서독과 동독은 이미 1940년대부터 연간 100만 명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서로를 왕래할 수 있었으며, 1주일정도 상호방문지에서 거주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양독 통일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